



주간통일정세 2011-33(2011.08.08~08.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7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8/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전일춘 북한 노동당 39호실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11일 공장 현지 지도를 전하면서 전 실장과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보도
- 39호실은 노동당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곳으로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문천 금강제련소,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폐) 제작,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전일춘은 지난해 3월10일 북한의 경제개발 자금을 담당하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에 선임됐고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이사를 맡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UFG 중단" 촉구... 한·미에 공개서한(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지를 요구
- 대표부는 7일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UFG연습 중지로 조미관계, 북남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공식표명 해야 할 것"이라며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민심의 기대에 비춰볼 때 그 다음 날부터 상대방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관계개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北김경희 공식석상 등장...김정일 현지도도 수행(8/8, 조선중앙통신)

-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일 위원장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경남도



소재)를 현지지도 했다고 전하면서 수행자 명단에 김경희 부장의 이름을 올림.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부장 외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 당비서, 현철해 국방위 국장,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함께 함.
- 김 위원장은 기업소 생산능력확장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수직방사직장, 견철직장 등 기업소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물질적 기술적 토대에 기초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
-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로, 북한은 비날론을 '민족의 주체섬유'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주민들의 의복생활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北매체, 李대통령 비난 문구 삭제 후 보도(8/9, 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이 기존 기사를 재방송하면서 이 대통령 실명 비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양방송은 9일 오전 8시50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해외의 동포들이 대단결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족대단결은 통일운동의 중요과제'라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 기사는 지난 6월28일에도 보도됐던 것으로 9일 재방송에서는 기존 기사에 포함된 '이명박 역적패당', '이명박 역적'이라는 표현이 각각 '남조선 보수집권세력', '남조선 보수패당'으로 바꿈.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5대 매체들은 5월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천70건에 달하는 이 대통령 실명 비난 기사를 내보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전후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달 5일부터는 대통령 실명 비난 기사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관망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분석

● 北총리, 산업현장 현지 요해(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6일부터 10일까지 여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요해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최 총리는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 안주절연물공장, 락량구역 연료사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해 현지에서 협의회를 가짐.
- 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절연물 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연



료를 충분히 공급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선생산을 늘리고 전력생산을 위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줄 데 대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소개

● 김영춘 '위상 약화'...北군부 세대교체 일환(8/11, 연합뉴스)

- 남한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와중에 김 부장의 위상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을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 그 배경과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은 김 부장의 위상 하락은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관련된 군부 내 젊은 세력들이 기존 김 부장의 세력들을 치고 나가는 세대 간 실력대결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사실 김 부장의 위상 약화는 지난해 당대표자회에서 김 부장보다 7살이나 어린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과 대비돼 지속적으로 거론
- 그러나 김 부장의 위상 약화 및 리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세대교체의 하나로 평가

● 北, "포사격 주장은 발파작업 오해" 전통문(8/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포사격에 대해 발파작업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 8시40분께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발파작업'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힘.
- 북측은 전통문에서 이번 포격사건이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남측의 고의적인 산물"이라면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
-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도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10일 서해 5개 섬과 가까이 하고 있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대상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정상적인 발파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전통문의 내용을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면서 "상투적인 억지 주장이 있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 **北, 日방위백서 비난…"침략문서"(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11일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한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를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의 방위백서는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주변나라의 영토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쫓아막고(규정하고) 중국의 해상위협을 떠든 것도 바로 그 연장"이라고 지적

● **北외무성 "북미 이산상봉 긍정 검토"(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 측이 미국적십자회와 여러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있는 조선계 미국인들의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문제를 우리(북한)측에 제기해왔다"며 "우리 적십자회에서는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온라인게임 해킹' 부인…"南당국의 도발"(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북한 해커들이 남한의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해킹했다는 우리 경찰의 발표를 부인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괴뢰공안당국은 '북의 해커들이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해킹했다'는 이른바 '북의 사이버 테러설'을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咸南) 현지도(8/8, 중·평방·중통) ·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委 부위원장), 태종수(黨 비서), 현철해(국방委 국장),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나. 경제

- **EU, 北수해에 20만유로 지원...UN 추가자료 요청(8/9,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수재민을 도우려고 국제적십자연맹(IFRC)에 20만유로(미화 28만 달러, 한화 3억 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방송은 EU가 지원한 28만 달러는 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일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집행한 59만 달러에 포함돼 이미 사용됐다고 설명
 - 제롬 소바주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농지, 가옥 등의 피해 현황과 사상자 수치가 담긴 홍수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며 "유엔 합동 대책단이 공동으로 지원하기에는 자료내용이 불충분해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 **北 "평양-상하이 무비자"...북중 관광 활발 (8/9,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1일 취항한 평양-상하이간 항공편을 이용해 많은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으며 북중 당국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비자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 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1일부터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조선에 와 명승지들과 기념비적 창조물을 돌아봤다"며 "이 항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힘.
 - 통신은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이 활발해지도록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실례로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오는 관광객들을 시중 없이 상하이 푸둥(浦東) 비행장과 평양 비행장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7월 폭우로 北농경지 5% 훼손"(8/10,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폭우로 북한 전체 농경지의 5%가 훼손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FAO는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각 국가조정위원회가 유엔에 보고한 예비 추정치를 인용해 "7월11일부터 31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5만9천340ha의 농경지가 침수·매몰 혹은 유실됐다"며 "이는 북한 전체 농경지 122만4천ha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
 - 이어 "(폭우가) 황해도를 비롯한 남부 곡창지대를 강타해 재배 중인 작물이 손상을 입고 농업 기반시설이 파괴됐다"며 "황해남도 청단군, 재령군, 안악군, 은천군, 평안남도 회창군, 평원군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FAO는 전함.



- **"北, 미얀마서 쌀 8천t 수입"(8/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미얀마로부터 쌀 8천t을 수입기로 하고 현재 북한의 대형화물선이 양곤항에서 쌀을 싣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방송은 미얀마의 반정부 온라인 매체인 '미지마뉴스'를 인용, "북한은 미얀마 군정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쌀 8천t을 수입하기로 하고 지난 8일 1만4천t급인 두만강호를 양곤항으로 보냈다"고 밝힘.

- **"WFP, 北수재민에 비축 밀가루 80t 방출"(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수재민 7천명에게 밀가루 80t을 방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WFP는 "이번에 방출된 밀가루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미리 비축해뒀던 것으로 비 피해를 특히 많이 입은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수재민들에 지원될 것"이라고 방송에 밝힘.

- **"상반기 美NGO 대북지원액 작년 1년 치와 비슷"(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국제무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미국산 물품은 총 180만 달러 상당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지난해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자는 묘목과 옥수수 등 28만 달러어치로 올해의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190만 달러 가량의 미국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감.

- **中도문, '北 전용 공업단지' 개발 본격화(8/12, 연합뉴스; 연변인터넷방송)**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도문(圖門)시가 북한 전용 공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12일 연변인터넷방송과 도문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력을 고용,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공해 수출하게 될 '도문 북한공업구' 개발이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 연변인터넷방송은 도문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진서동 부주임을 인용, "지린(吉林)성과 연변주 정부로부터 북한 공업구 개발에 대한 초보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달 중 최종적인 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방송은 단둥(丹東)에서 북한 인력을 채용한 선례가 있고 연변이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지구 사업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북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북한 공업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北, 쌀 수입 줄이고 값싼 옥수수 늘려(8/14,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량을 늘리면서 단가가 높은 콩과 쌀 대신 옥수수 등 단가가 낮은 곡물 비중을 많이 늘린 것으로 나



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곡물의 t당 평균 수입 가격은 작년 372달러에서 올해 404달러로 8.6% 상승해 올해 전체 곡물 수입 비용은 작년 5천270만 달러에서 6천31만 달러로 14.4% 증가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은 이와 관련 "작년도 곡물 수입량 역시 평년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수입량을 더 늘렸다는 점은 식량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콩이나 쌀보다는 옥수수 등을 많이 구입한 것은 외화난에 따른 현상 같다"고 분석

■ 기타 (대내 경제)

- 대동군(平南)에 시멘트 생산기지 새로 건설 및 희천↔향산(平北) 송전선공사 진행 보도(8/8, 평·중방)
- 모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김정일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忠僕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 독려(8/10, 중통·민주조선)
- 北 「농근맹」 중앙위 제63차 전원회의, 8.10 리명길(「농근맹」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8/10, 중통)
- 北 '건설경제 및 기준연구소'(1961.8.7 창립), "지난 50년간 건설부문의 규정과 기준 연구제정 사업에서 성과 이룩" 자랑(8/10, 중통)
- 北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희천언제 인공호수에 10만 5,000여 마리의 치어 방류(8/10,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휴대전화 가입자 66만 명 넘어"(8/1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6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전함.
-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10일 내놓은 '2011년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6만6천517명임.
- 지난 3월 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3만여 명이었고 이후 석 달 사이에 13만여 명이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평양서 동명왕 전설 담긴 '기린굴' 발견"(8/11, 조선신보)

-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최근 평양의 모란봉 부근에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기린굴'을 발견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전함.
- 조선신보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기린굴은 모란봉의 영명사에서 200m 떨어진 모란봉 바위 쪽에 있다"며 "굴은 무너져 형체가 약간 보일 뿐이지만 굴 앞에 '기린굴'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고, 이 바위는 글자의 마모상태를 봐서 고려시기쯤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태풍 9호 '무이파'에 의한 서해안지역 10여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8/9, 중통)
- 황해남도 100여동의 살림집들과 10여동의 공공건물들이 허물어지고 10여대의 전주 파손에 의한 전력공급 부분적으로 중단 및 2만3,000여 정보의 농경지 심한 피해 발생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北 해상포격에 '자제' 촉구(8/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 북한군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포 사격과 관련, 북한에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포 사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며 "북한이 최근 (북미 간) 뉴욕회담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작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
- 이와 함께 놀런드 대변인은 이번 포 사격이 최근의 대화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언급,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함.

● **"日방위백서, 北핵무기 소형화 가능 판단"(8/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일본 방위백서'를 받아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일본은 또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포격"이라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각각 표현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송 의원은 전함.
- 일본은 북한 상황에 대해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인구의 5%를 현역으로 동원하는 등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체제 문제 등으로 향후 체제 불안정성 고조가 예상된다"고 기술



- **美 "北식량문제 일차 책임은 정권"(8/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
 - 그는 특히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을 끔찍한 고립에 빠뜨린 책임도 있다면서 "최고의 길은 북한 정권이 무역과 개방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촉구
 - 놀런드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차 "여전히 평가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

- **"美, 北에 문화유적 보존지원 제안"(8/1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측에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기술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이 방송은 지난달 28~2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각각 단장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핵·관계 정상화 등 주요 현안 논의 외에 양국 간 악화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 지원 의사도 전달했다고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中·日 수석대표, 6자회담 재개 협의(8/11,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1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
 - 그는 우 특별대표와 두 시간에 걸쳐 만찬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회동에서) 우 대표가 말한 것이나 내가 답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었으며,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수석대표 회동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3단계 프로세스' 가운데 남북 대화(1단계)와 북미대화(2단계) 이후 성사된 것임.

3. 대남정세

- **北 연평도 인근 해상포격..군 대응사격(8/10, 연합뉴스)**
 - 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연평도 동북쪽 해상으로 포 사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께 북한 황해남도 용매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3발의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그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오후 2시께 K-9 자주포 3발을 대응사격 했다"고 말함.

- NLL 부근으로 향한 북한의 포 사격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군은 대응사격 직후에 연평도 주민에게 대 피 안내 방송을 했으며 우리 군과 주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합참 관계자는 "오후 1시25분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통신을 하고 이후 대응수준을 정했다"면서 "함정 근처에 가해진 위협이면 즉각 조치했겠지만 NLL 선상까지만 왔기 때문에 우리도 NLL 쪽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임.

● **軍, 백령도 인근서 北선박·주민 구조(8/12,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지난 11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거나 표류 중인 북한 선박 3척과 주민 7명을 구조해 이 가운데 3명은 돌려보내고 4명은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7시12분과 오후 9시30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침수로 침몰 위험에 처한 전 마선(소형 배) 2척을 발견해 배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다"면서 "전마선은 선원 구조 후 침몰했다"고 말함.
- 군은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백령도 인근 NLL 이남 지역에서 표류 중인 동력 목선을 발견, 연료를 제공해 12일 오전 2시38분께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NLL 남쪽 4.5k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돌려보낸 선원들의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의도적 침범이 아닌 어선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보내도록 한다"면서 "여러 척이 월선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日, 10일 북핵 6자회담 관련 문제 논의(8/10)

- 중국과 일본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함. 일본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辅)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를 위해 10일(현지시각) 중국을 방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9일 일본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 스기야마 국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19개월 만에 다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스기야마 국장은 오는 5일 몽골을 방문하고 나서 6일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천영우-도널런, 북핵·동맹현안 집중 협의(8/11)

- 방미중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톰 도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빌 번즈 국무부 부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천 수석은 또 지난달 뉴욕 북미대화에 참여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회동, 북한이 개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함.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양국 간 협의에서는 북한과의 향후 협의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관계와 관련된 동맹현안, 정상외교 등이 주의제"라고 말했다.
- 양국은 특히 북한이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농축 설비에 대한 평가와 실제적 진실확인 방안 등도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가 최근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병행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대한 대응책 등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천 수석은 번즈 부장관과 회동하는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면담'일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北과 '후속대화' 위해 비핵 사전조치 압박>(8/11)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뉴욕 북미대화 이후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2라운드 협상'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음.



- 미국이 1차 뉴욕 접촉을 통해 북한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사전조치의 내용을 전달한 만큼 탐색전이 아닌 본격적인 협상(2라운드)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성의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임.
- 대신 양국은 협상의 형식(틀)과 순서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음. 이미 한차례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한 만큼 북미대화 이전에 남북대화를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확실히 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꼭 뭐가 먼저 돼야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게 효과적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미국에는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결국 향후 협상의 지속과 의미 있는 전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음을 재확인한 것임. 이에 따라 뉴욕 1차 접촉 이후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어떤 행보를 취할 지가 관심사로 대두하게 됐음.
- 북한은 현재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전제조건 없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핵 문제의 판을 키우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한미 양국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시하겠다고 한 만큼 6자회담과 관련된 문제가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당국자는 "6자회담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비핵화 사전조치 해결하고, 6자회담 열리면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비핵화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물론 한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이미 공개된 영변 이외의 우라늄농축시설 존재 여부와 정확한 핵 능력과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사전조치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는 북한이 한미 양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가능성이 적다는 데 있음. 이 경우 북한은 경색국면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면서 또 다른 '도발'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군축·비확산 문제에 전착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응은 난처해질 수 있음. 재선 도전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외교적 성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외교 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어차피 탐색전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북한도 쉽사리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다양한 신경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한 축으로, 북한과 중국이 다른 한 축으로 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 핵 문제의 대치전선이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임.
- 이 과정에서 협상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다양한 접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타협의 산물로 형성될 교집합의 내용이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미·북 관계

● 미국방부, 北에 '유해발굴 재개' 회담 제안(8/9)

- 미국 국방부가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음.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지난 2일 유해발굴 사업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냈으며, 아직까지 북한 측 답신은 없으나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8일 보도했음.
- 파커 공보관은 또 올 가을께 미군유해 발굴과 관련된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했으며, 조만간 북한 측 답신이 오면 회담 장소와 일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회담 장소는 북한이나 미국, 또는 제3국이 될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논의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파커 공보관은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 측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유해 발굴재개 일정을 포함해 북한에 머무는 미군 측 인력의 안전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간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지난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말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유해발굴 사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고 올초 미국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북미 이산가족 서신교환 참가자 명단 작성"(8/9)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모임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는 8일 북한과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사업에 참가할 미국 측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음.
-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자녀를 두고 온 사람들이 우선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며 "시카고에 2명, 유타에 1명, 필라델피아에 1명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사무총장은 또 "미북 간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은 직접 상봉에 앞서 생사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서한 시범교환의 시기와 정확한 규모 등 세부사항은 미국 적십자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이달 초 시카고에서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로버트 도드 하원의원이 미국 적십자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며 "미국 적십자사와 북한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 적십자사는 재미 이산가족 10가족의 서신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고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성 김 인준보류, 대북정책 우려 때문"(8/10)

- 최소한 1명 이상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FP는 "최소한 한 명의 상원의원이 인준 보류(hold)를 요청했다는 것을 세 명의 상원의원 고위 보좌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FP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길을 추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가 인준 보류와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성 김 지명자의 인준 문제와 관련된 전망이 불투명하게 남아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이와 관련,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추가적인 대북접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없을 것임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서한을 통해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국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성 김 지명자에 대한 조속한 상원 인준을 기대했음.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레브리핑에서 "성 김 지명자는 최고의 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그곳(한국)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음.
- 당초 성 김 지명자는 8월초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인준절차를 모두 끝낸 뒤 이달 말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었음.

● 美, 北 해상포격에 '자제' 거듭 촉구(8/11)

- 미국 정부는 10일 북한군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포 사격과 관련, 북한에 대해 '자제'를 거듭 촉구했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남북 간 포 사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 놀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며 "북한이 최근(북미간) 뉴욕회담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작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된 메시지는 북한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대화 진전을 위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이번 포 사격이 최근의 대화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밖에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요구해온 태도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포사격) 사태는 종료됐고, 이제는 현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한국과 다른 대화 상대국에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외무성 "북미 이산상봉 긍정 검토"(8/11)**

- 북한은 11일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 측이 미국적십자회와 여러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있는 조선계 미국인들의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문제를 우리(북한) 측에 제기해왔다"며 "우리 적십자회에서는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변인은 또 "북미 쌍방이 이 같은 인도주의 문제부터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면 앞으로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상호 신뢰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인도주의 문제에서 협력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美 "北식량문제 일차 책임은 정권"(8/12)**

- 미국 정부는 11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식량난)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을 끔찍한 고립에 빠뜨린 책임도 있다면서 "최고의 길은 북한 정권이 무역과 개방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차 "여전히 평가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음.
- 그는 그러나 전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 식량난이 예년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게 국제적 컨센서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 **"상반기 美NGO 대북지원액 작년 1년 치와 비슷"(8/12)**

- 올해 상반기 미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한 규모가 작년 1년 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국제무역 현황 보고



- 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미국산 물품은 총 180만 달러 상당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 방송은 "상무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3월 구호물품 74만 달러, 4월 의약품 104만 달러어치의 물품이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로 미국의 민간단체인 머시코, 사미리탄스퍼스, 조선의 그리스도인벳들 등이 보낸 구호물품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자는 묘목과 옥수수 등 28만 달러어치로 올해의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190만 달러가량의 미국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갔음.

● "美, 北에 문화유적 보존지원 제안"(8/13)

-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측에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기술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지난달 28~2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각각 단장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핵·관계 정상화 등 주요 현안 논의 외에 양국 간 악화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 지원 의사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 방송은 "미 전문가들은 북측에 구체적인 협력과 교류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안했으며 이 중 하나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속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화유적 보존 등을 돕는 것이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뉴욕 소재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비사카 테사이 회장이 지난 5월 후원자들과 함께 방북해 주요 역사 유적을 둘러본 바 있음.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3월 12명의 북한 경제대표단의 뉴욕 방문을 주선하는 등 북한과 민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편 이 방송은 "미북 대화에서 문화 지원 방안 외에 미군유해 발굴 논의나 미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 미북 간 진전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논평했음.

다. 중·북 관계

● "北평양-中선양 고려항공편 확대"(8/9)

- 북한 평양과 중국 선양(瀋陽)을 오가는 고려항공편이 기존 수요일과 토요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증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고려항공을 이용해 선양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던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양-평양 간 항공편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하루 한 차례씩만 있었는데 최근 방북할 때 이 노선이 모두 두 편으로 증설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평양에 머무는 동안 호텔 등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며 "지난 1일 시작된 '아리랑축전' 때문에 선양-평양 간 항공편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약 2개월 전에 같은 경로로 평양을 방문했던 다른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도 "두 달 전까지는 선양-평양 간 항공편 증설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승객이 많거나 아리랑 축전 등과 같이 수요가 생기면 임시증편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정기노선 증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한 대북 전문가는 "아리랑 축전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탑승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北 "평양-상하이 무비자"...북중 관광 활발(8/9)

- 지난달 1일 취항한 평양-상하이간 항공편을 이용해 많은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으며 북중 당국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비자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 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1일부터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조선에 와 명승지들과 기념비적 창조물을 돌아봤다"며 "이 항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 통신은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이 활발해지도록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실례로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오는 관광객들을 사증 없이 상하이 푸둥(浦東) 비행장과 평양 비행장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평양-상하이 노선 이외에도 7월28일에는 평양-시안(西安) 노선이 취항했고, 오는 19일에는 평양-쿠알라룸푸르 노선이 새로 개설돼 말레이시아인들의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中매체, 연평도 포격 신속보도(8/10)

- 중국 매체들은 10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포격에 이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오후 3시 44분 '남한군이 해상 경계선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는 제목의 한 문장짜리 긴급 기사를 타전했다.
- 통신은 "한국군이 서해 해상 분계선에서 포성을 청취한 후 사격에 나섰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후속 기사에서 연합 뉴스를 인용해 우리 군이 3발의 포성을 청취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이 기사에서 NLL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 NLL 앞에 '분쟁이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통신은 또한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 4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북한은 이 사건이 남한군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 한편 반관영 통신 중국 신문사도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포격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 中도문, '北 전용 공업단지' 개발 본격화(8/12)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 도문(圖們)시가 북한 전용 공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연변인터넷방송과 도문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력을 고용,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공해 수출하게 될 '도문 북한공업구' 개발이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 연변인터넷방송은 도문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진서동 부주임을 인용, "지린(吉林)성과 연변주 정부로부터 북한 공업구 개발에 대한 초보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달 중 최종적인 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문시 경제개발구 내에 기반 조성이 완료된 북한 공업구는 20억 위안이 투자돼 1만km²의 규모로 개발될.
- 북한 공업구 입주 기업 유지와 관리는 허베이(河北)성 지예(基業)그룹이 맡고 이 공업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한 내 판매와 이곳에서 일할 북한 인력 파견은 북한 라선시가 담당하게 될.
- 방송은 단둥(丹東)에서 북한 인력을 채용한 선례가 있고 연변이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북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북한 공업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음.
- 방송은 우선 45명의 북한 인력이 북한 공업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북한 인력 파견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허베이 지예그룹은 지난 8일 도문경제개발구 내에 건축자재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단 건설 착공식을 했음. 도문시 정부는 애초 이 착공식을 '도문 조선(북한) 공업구 준공식 및 입주 항목 기공식'이라고 명명했으나 돌연 '허베이 지예그룹 공업단지 착공식'으로 변경했으며 외부 인사들의 초청도 취소했음. 이를 두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도문시가 북한 공업구 개발 행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를 추진해온 도문시는 지난해부터 북한 공업구 개발과 북한 인력 고용에 공을 들여왔음. 도문시 경제개발위원회 위탁을 받은 연변 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는 지난해 10월 북한 무역성과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 고용을 위한 노무협약을 체결, 우선 100명의 북한 인력을 들여오기로 합의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 비난(8/10)

- 북한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에 대해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매국 반역의 외교"라고 비난하며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음.
- 노동신문은 10일 '독도강탈야망을 부추긴 조용한 외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신성한



영토문제로 이에 대한 양보나 묵인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반민족적 죄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신문은 최근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 방문 시도 소동과 방위백서 의결 등을 거론하며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비위만 맞춰온 남조선 당국의 대일 굴욕외교,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오만성과 독도강탈책동의 강화라는 결과만 낳았다"며 "일본의 극우반동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이 튀어나올 때마다 엄하게 추궁했다면 오늘과 같은 엄중한 국면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남조선 당국의 그 어떤 친일사대 매국 행위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소동은 물론 독도강탈책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北, 日방위백서 비난... "침략문서"(8/10)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11일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한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를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라고 비난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의 방위백서는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주변나라의 영토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쫓아박고(규정하고) 중국의 해상위협을 떠든 것도 바로 그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현실은 영토강탈을 군사적으로 정책화한 일본 반동들의 올해 방위백서는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침략문서, 전쟁문서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며 "영토팽창과 재침야망에 들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논평은 "일본 반동들은 최근에 발표한 이 책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운운하면서 그 무슨 '우려'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이것은 그들의 집요한 대북 적대의식의 발로로 또 하나의 용납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덧붙였다.

● "日방위백서, 北핵무기 소형화 가능 판단"(8/11)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일본 방위백서'를 받아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일본은 또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포격"이라고, 전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각각 표현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 일본은 북한 상황에 대해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인구의 5%



를 현역으로 동원하는 등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체제 문제 등으로 향후 체제 불안정성 고조가 예상된다"고 기술했음.

- 일본은 자국의 국방정책으로 '동적(動的) 방위력' 구상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하고, 육상자위대를 감축하는 대신 해·공 자위대 및 남서제도 전력증강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 송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 책임을 명백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라며 "북한이 보유 중인 스커드-B(사거리 300km)와 스커드-C(사거리 500km)나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천300k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마. 러·북 관계

● "北김정일, 이르면 다음 달 러시아 방문 가능성"(8/1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11일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준공행사가 내달 중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며 푸틴 총리가 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기간에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해둔 상태여서 김 위원장이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방러 중이었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김 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서 "방문 시기 결정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바. 기 타

● "남북러,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 중"(8/8)

-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부설 논의가 3국 가스당국 간에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이 합의에 이르면 3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본격적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8일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모스크바 시내 스피리도노프카 거리에 있는 외교부 영빈관에서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남북한 및 러시아 사이의 3각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3국 가스 당국 전문가들이 북한 경유 가스관



- 건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만일 전문가들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면 3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외에 역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송전선을 건설해 러시아의 잉여전력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 "러시아는 앞서 이미 세계식량기구(WFO)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현재 5만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식량난 극복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러시아 지도부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방문 초청을 받은 상태"라고 밝히고 "방문 시기 결정은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규정되는 한-러 간 협력이 내실있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사태 해결에 기울인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대화 와 북미 대화에 뒤이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과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양측은 현재 재개 여부를 논의 중인 6자회담이 내용 있고 실질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블라빈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제1부서기,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어 9일 한-러 및 북-러 경제공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비탈리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사 사장 등과 면담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저녁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北 "UFG 중단" 촉구... 한·미에 공개서한(8/8)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지를 요구했다.
- 대표부는 7일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UFG연습 중지로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공식표명해야할 것"이라며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민심의 기대에 비춰볼 때



그 다음 날부터 상대방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 이어 "UFG연습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 대응의지와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추호의 변화가 없다"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에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표부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최소한 올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으로 대국으로서의 실천적 의지를 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판문점대표부 공개서한은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는 현 국면을 반영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외미군 3천여 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 명과 군단, 합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한국군 5만6천여 명 참가하는 UFG연습을 실시함.

● "北, 미얀마서 쌀 8천t 수입"(8/10)

- 북한이 미얀마로부터 쌀 8천t을 수입기로 하고 현재 북한의 대형화물선이 양곤항에서 쌀을 싣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했다. 방송은 미얀마의 반정부 온라인 매체인 '미지마뉴스'를 인용, "북한은 미얀마 군정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쌀 8천t을 수입하기로 하고 지난 8일 1만4천t급인 두만강호를 양곤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 '미지마뉴스'는 양곤항에 정박한 두만강호의 사진 2장도 공개했다.
- 방송은 "두만강호는 현재 50kg짜리 쌀 16만 포대를 선적 중이며 두만강호가 정박해있는 양곤항 슬레 제3부두에는 방수포를 덮은 쌀 운송용 트럭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산 쌀은 싸라기 비율이 25%로 높아 품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북한은 최근 캄보디아에 쌀 수입하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의 광산 개발 및 수력발전 댐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WFP, 北수재민에 비축 밀가루 80t 방출"(8/11)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수재민 7천명에게 밀가루 80t을 방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WFP는 "이번에 방출된 밀가루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미리 비축해뒀던 것으로 비 피해를 특히 많이 입은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수재민들에 지원될 것"이라고 방송에 밝혔다.
- 방송은 이번에 긴급 지원될 밀가루 80t은 수재민 7천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FP는 방송에 "올해 북한 내 홍수가 농경지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곡물 생산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농경지 피해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정적인 듯하다"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클린턴, 8.15 광복절 경축성명 발표(8/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제6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해 8월 15일 '독립'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어 그는 "역사와 공통가치를 공유하면서 구축한 뿌리 깊은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더욱 확대해 왔다"며 "양국은 지역안보 강화를 비롯해 무역확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 양국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밖에 "이 특별한 날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와 보낼 전세계 한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美, 한미FTA 절차 문제로 또 논란 조짐"(8/13)

- 미국 의회의 상원 지도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다음 달 처리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절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일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공화당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원이 TAA 연장안을 처리한 이후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앞서 이달초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분리해서 처리기로 합의했으나 FTA 이행법안 제출시기가 다시 '장애물'로 등장한 셈임.
- 상원의 한 민주당 참모는 "포트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선 경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등과의 FTA를 지지하는 로비단체들은 포트먼 의원이 최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그러나 이들은 포트먼 의원이 매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맞서 합의를 파기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있



음.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매코넬 대표의 지명으로 연방정부 지출감축 방안을 논의하게 될 초당적 특별위원회에 포함되는데다 추후 상원 재무위원회에 배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도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임.

- 그러나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이 FTA 이행법안이 정식 제출되지 않을 경우 TAA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수개월간 지속돼온 'FTA-TAA 연계' 논란이 다음 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었음.

나. 한·중 관계

● 中 "韓수출 수산물, 기름유출 영향 없다"(8/8)

- 중국 국가품질감독총국(질검총국)이 "한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은 보하이(渤海)만 평라이유전 기름유출사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5일 통보해왔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8일 밝혔음.
- 질검총국은 한국에 수출되는 수산물 양식장들이 유전 기름유출 오염지역에서 50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질검총국은 또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허베이(河北)성 러팅(樂亭)현 랑위커우(浪窩口) 소재 양식장들의 가리비가 집단폐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한국에 수출되는 물량이 아니라면서 안심하라는 통보를 해왔음.
- 질검총국은 아울러 보하이 만과 접한 허베이, 산둥(山東), 랴오닝(遼寧)성 정부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한국 수출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 질검총국은 그러나 한국 수출용 수산물에서 벤조피렌 검사를 통해 유류오염 잔류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불합격 사례가 나오면 즉각 수출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보하이 만 기름유출사고 이후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허베이, 산둥, 랴오닝성 3곳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검사를 하고 있음. 벤조피렌 기준치는 어류(2.0 μ g/kg 이하), 조개류(10.0 μ g/kg 이하), 연체류 및 갑각류(5.0 μ g/kg 이하) 등임.
- 보하이 만 평라이 19-3 유전의 B, C 시추대에서 지난 6월 초·중순부터 기름유출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천500배럴이 유출됐고 아직도 소량의 원유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코노코필립스 측의 설명임.



다. 한·일 관계

● <기대-우려 교차하는 '독도 패션쇼'(8/9)>

- 한복연구가이자 디자이너인 이영희(75)씨가 10일 독도에서 패션쇼를 여는 데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이씨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바람의 옷, 독도를 품다'라는 주제로 독도에서 패션쇼를 열기로 하고 9일 오후 강원도 묵호항을 출발했음.
- 패션쇼는 애초 9일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풍랑주의보로 울릉도로 들어가는 배편이 끊겨 모델과 스태프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일정을 하루 연기했음. '이영희 한복 관계자'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행사 관계자를 5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이고, 2시간 정도 진행할 계획이던 공식 행사도 30분으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독도 접안 문제 때문에 패션쇼를 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이영희 디자이너의 옷은 바람에 날릴 때 더욱 아름답게 보여 '바람의 옷'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면서 "바람이 많은 독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이씨는 13명의 모델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 조선시대 궁중의상은 물론 섬에 어울리는 모시옷 등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향아리나 바구니 등의 소품을 활용해 전달할 예정임.
-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이번 패션쇼와 함께 독도를 배경으로 하는 화보를 촬영해 이씨의 활동 무대인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 대한노인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패션쇼는 '문화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토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낳음. 하지만 이번 행사는 최근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미국 국무부 방침이 알려져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한편에서는 우려를 낳기도 함.
- 이영희 한복 관계자는 "이번 패션쇼는 최근 독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기획됐다"면서 "만약 독도 접안이 어려워 패션쇼를 개최하기 어려우면 모델과 스태프만이라도 며칠간 남아 화보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영희 디자이너는 프랑스 파리와 평양 등지에서 처음으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국내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독도에서 패션쇼를 열겠다는 이씨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이씨 측은 '순수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최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매우 예민해진 시점에 특정 디자이너의 명성을 높이거나 상업적 활용의 소지가 있는 패션쇼를 여는 것이 적절한가 걱정하는 시각도 있음.
-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 패션쇼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란 것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배경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행동 전에 과연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를 높일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에 어떤 빌미를 줄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첫 경정급 울릉경비대장 취임(8/9)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독도경비대를 총괄하는 울릉경비대에 사상 처음으로 경정급인 유단희(54) 경비대장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유 대장은 "울릉도와 독도 경비를 총괄하는 대장으로서 국토수호 대열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며 "외부 세력의 독도에 대한 위협 등에 흔들리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 그는 이번 주 중에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 해안경계근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서울 혜화경찰서에 근무했던 유 대장은 경찰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뜻에서 울릉경비대와 독도경비대장 직급을 격상한 이후 처음 부임한 울릉경비대장이다. 그는 경비대장 임용 당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사령관으로 왜군에 맞서 싸운 유형 장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낳았다.

●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8/10)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방안이 부상한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제안이 이뤄지면 49년 만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지만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강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이 신문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여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풍토를 한국에 정착시켜왔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음.

● 담배판매상 "日상품 불매운동 벌이겠다"(8/10)

-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도발과 방위백서 발간에 항의하는 뜻으로 담배를 비롯한 일본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음.
- 중앙회는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일본 상품 하나하나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음.
- 중앙회는 전국 142개 조합 14만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 담배 판매 중단 등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전달하고 각 지역 조합 차원에서 관련 집회를 계속 열도록 촉구할 계획임.

● '日위안부 문제' 4개국 연대 특별집회(8/10)

- 매주 수요일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4개국과 연대한 특별 집회를 열었음.
- 정대협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82차 정기 수요시위로 '해방 66주년, 20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를 열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음.
- 정대협은 "지난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넘기며 평화와 상생의 새 원년을 시작했어야 할 올해 일본의 평화 정착 노력은 온데간데없고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 단체는 "해방 66년을 맞아 세계의 양심 있는 시민과 함께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통해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음.
- 이날 연대 집회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 홋카이도, 히로시마, 후쿠야마, 후쿠오카, 독일 베를린, 필리핀 마닐라, 대만 타이베이 등 4개국 9개 도시에서도 현지 시민단체와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열렸음.
- 이날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과 이흥구 전 국무총리, 손숙 전 환경부 장관, 연극인 박정자씨 등이 참석했음.

● 日 관방장관 "독도 문제에 강력 대응"(8/11)

-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와 독도에서의 특위 개최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음.
-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와 독도 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이는 같은 날 간 총리가 독도 특위 개최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함.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강력한 조치로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에 제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 <국회특위 독도개최 연기..한일 충돌 피해>(8/11)

- 국회 독도특위가 12일 독도에서 열기로 한 전체회의를 연기하면서 대결 구도로 치달던 한·일 양국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음. 회의 연기의 표면적인 사유는 기상문제임. 그러나 불필요한 '확진'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일본 측 의도에 휘말리고 양국관계도 견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 내부의 우려가 물밑으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됨.
- 독도특위 측이 불안정한 기상문제를 이유로 내걸어 회의를 자진 연기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자연스럽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된 셈임.
- 사실 이번 특위 개최를 놓고 양국 간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았음.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 → 자민당 의원 방한 → 방위백서 발표에 이어 일본이 독도특위를 이유로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결의 악순환'이 전개될 소지가 컸다는 분석임.
-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측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왔음.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독도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5일 독도 회의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1일 오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특위의 독도 회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도 이런 맥락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했던 정부도 안도하는 분위기임.
- 문제는 여야 대표가 14, 15일 독도 방문을 추진하는 등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임. 독도특위도 "기필코 8월 중에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특위 간사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독도 특위를 국회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낸 상태임.
- 앞서 일본은 독도특위의 독도 전체회의 개최계획에 대해 유감 표명을 넘어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고 강하게 반발했음. 이에 따라 일본이 여야 대표의 독도방문에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



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일종의 '에드벌론'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음. 추가 도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분위기를 미리 떠본 것 아니냐는 것임.

- 일각에서는 최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유로 일본이 2006년에 했듯이 독도 부근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기도를 해오든 독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이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TV 설치해 독도 생중계..24시간 '감시'>(8/12)

- 청와대는 12일 독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TV를 청와대 내부에 설치했음.
- 이날부터 민원인 안내실인 연풍문에 40인치급의 대형 LED TV를 24시간 틀어 놓고 독도의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음. 시간대별로 독도의 여러 면을 돌아가면서 비춤으로써 누구나 쉽게 독도의 전경을 볼 수 있음.
-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접안이 쉽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독도를 화면으로나마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토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 것임. 독도에 KBS가 설치한 폐쇄 CCTV 영상을 받아 화면을 내보내는 방식임.
-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직원 뿐 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도 독도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TV를 설치했다"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최근 일본의 극우 성향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고 방위백서에도 수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 이미 서울 세종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에도 지난해부터 TV를 놓고 독도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등 몇몇 공공기관에 이 같은 독도 TV를 운영 중이나 그동안 청와대는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았음.

● 日내각 "자민의원 韓 입국거부 매우 유감"(8/12)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한국이 자민당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음. 일본 정부는 12일 간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일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일한간의 우호협력 관계에 비추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답변서를 확정했음.
- 이는 자민당 측이 의원들의 입국을 한국이 막은데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은 데 대한 답변임.



● 김외교 "공극적으로 동해 단독표기 추진"(8/12)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동해 표기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유엔 가입 이래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다"면서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표기 문제도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배 잔재 청산작업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우리가 국가를 갖지 못했던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이후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동해 단독표기를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협의상황을 보면 일본해 단독표기에는 많은 나라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동해' 대신 '한국' '조선해' 등 다른 명칭의 사용 여부에 대해 "유엔 가입 당시 이미 검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음.
- 그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이미 1954년에 ICJ 제소를 공식 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당시 외교공한에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한 것은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 "위안부피해 지원법안 日의회서 8번 기각"(8/13)

- 일본 야3당이 지난 2001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해 왔으나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 전 일본 참의원(공산당)이 13일 밝혔다.
- 하루코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열린 제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나를 포함한 야3당 여성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대만 등 위안부 여성의 모국을 돌며 각국 정부와 국회의원, 피해자를 만났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든 법안을 8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매번 기각됐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뒤에는 법안 제출조차 어려웠다"고 전했다.
- 일본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지난 2001년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정부 책임으로 피해자 보상 ▲위안부 문제 지속 조사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한 해결추진회의 설치 등을 뼈대대로 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만들었음.

- 하루코 전 의원은 2001년에야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저지하고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운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지방의회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강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문제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날 개막한 연대회의에는 한국과 대만, 동티모르, 일본, 태국, 필리핀, 독일, 미국, 캐나다의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했으며 15일까지 전시 여성 성폭력피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태국에 사는 노수복 할머니와 올해 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송신도 할머니 등 국외 거주 위안부 피해 여성 2명이 참석했음.

● <軍 독도 주둔에 '입장변화' 여부 관심>(8/14)

- 국방부가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해 진전된 듯 한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끌고 있음.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음.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며, 정부 차원에서 군 병력의 주둔을 결정하면 군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란 공식 견해를 밝힌 것임. 군 안팎에서는 이런 태도 표명은 그간 군이 유지해온 견해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군은 지난 2008년 7월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특히 군은 독도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자극해 군대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에 대해 군의 입장이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치권에서 독도 수호를 강력히 주장하는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3박4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는 등 정치권에서 독도 도발과 동해 표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 때문에 군도 독도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방백서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고 연간 두 차례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을 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군 병력의 주둔 문제에 더욱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



- 적으로 정리했다는 관측임. 그러나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군을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음.
 - 다만,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독도 주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그는 "유사시 독도에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도록 작전계획이 짜여 있다"면서 "현재 해병대의 병력 운용상 울릉도에 중대급 규모인 100여명을 배치하고 소대급 규모인 25명을 독도에 순환배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의 규모와 횟수는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독도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군 병력 주둔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음.

라. 한·러 관계

● 김외교,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8/10)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박5일 간 러시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음.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찾은 김 장관은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으며 블라디미르 블라빈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제1부서기,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도 만났음.
- 또 9일에는 한-러 및 북-러 경제공동위 위원장을 맡은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비탈리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사 사장 등과 면담했음. 김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상외교·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실질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안정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음.
- 양국은 북핵 6자회담이 더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4강 방문 외교를 마무리했음.

마. 미·중 관계

● 中, 바이든 美 부통령 내주 방중 확인(8/9)

-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다음 주 방중을 공식 확인했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8일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7~22일 베이징(北京)과 청두(成都)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통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시 부주석의 연말 답방이



- 예상됨.
- 신화통신은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바이든 부통령이 방중 기간에 시 부주석과 회담하고, 후 주석과 윈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청두는 인텔, 세브론, 델 등의 미국 첨단 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곳이어서 바이든 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이어 쑨저(孫哲)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중미관계연구중심 주임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에서 남중국해 분쟁,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 부채, 동북아시아 및 중동문제 등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와 다젤 잠수함을 판매하는 계획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은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논평했음.

● <中 네티즌, 美 집중투자 당국 비난>(8/9)

- 중국 내에서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관련해 외환보유액을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당국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인터넷서널헤럴드트리뷴(IHT)은 9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 많은 미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도 화가 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내내 중국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베이징 당국의 외환 보유액 관리능력에 대한 독설과 비난들이 가득했음. 외환보유액은 지금까지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않는 소수 당국자 등의 문제였음.
- 인터넷 토론방 등에 오른 글들은 중국 당국이 국가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국수주의적인 내용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3조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절반가량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음.
- 한 네티즌은 온라인 글에서 "미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전략적 의사결정권자들이 돼지 같다"면서 "당국이 인민의 돈을 외국인들이 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 이 글은 즉시 삭제됐으며 이는 당국의 검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IHT는 추측했음. 다른 블로거는 "중국 사람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경제여건도 나쁘지 않지만 일반인들의 생계는 그렇게 좋지 못한 형편"이라면서 "이는 당국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려고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기 때문으로 이번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왜 중국이 미 신용등급 강등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도 말했음.
- IHT는 중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주변국들과 분쟁에 휩싸인 영토주권 문제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때로는 공격적으로 보이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음. 다



만 신문은 이런 반응들이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간 미국에 의해 구겨진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음.

● 美 캠프 "中 항모 보유는 정상적인 일"(8/13)

-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프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정상적인 일이며, 미·중 양국은 충돌을 피하면서 평화 공존할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3일 보도했음.
- 중국신문사는 "캠프 차관보가 전날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항모 보유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캠프는 이어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항모를 운용해왔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러 방면의 필요를 감안해 항모를 보유하려 하며, 따라서 중국이 항모를 건조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해가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해오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평화공존을 배울 수 있을지와 진정한 평화적 경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그러나 충돌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지혜를 발휘해 충돌을 피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캠프 차관보의 이런 언급은 지난 10일 중국의 첫 항모인 바랴그호가 첫 시험 항해에 나선 데 대해 같은 날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됨.
- 놀랜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랴그호의 시험 항해에 관해 질문을 받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장비(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어떤 설명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그동안 태평양함대를 통해 항모전단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서태평양 해상을 사실상 장악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그 영향력을 위협받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러, 美에 보복..미국인 여러 명 입국금지(8/10)

- 러시아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자국 관리들에게 입국 금지조치를 내린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여러 명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음. 현지 유력 일간 신문 코메르산트는 10일 러시아가 미국에 구금된 무기밀매상 빅토르 부트 등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의 입국금지 대상에는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된 '죽음의 상인' 부



- 트와 러시아 조종사 콘스탄틴 야로센코 체포에 관여한 미 마약단속국 (DEA) 관리들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미국은 지난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을 입국 금지 대상인 비자 블랙리스트에 포함했고 러시아는 이에 즉각 반발했음. 한 러시아 관리의 "미국도 비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입국 금지 대상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인 입국금지 대상 명단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러시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미국인은 누구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여론 66% "일본이 싫다"(8/12)

- 중국과 일본이 작년 9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충돌 이후 상대국에 대한 혐오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NPO법인인 '언론NPO'와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의 65.9%, 일본인의 78.3%가 각각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음.
- 이는 지난 2005년 같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상대국에 대한 혐오도가 가장 높은 것임. 이번 조사는 6월과 7월에 걸쳐 실시됐으며 일본에서 1천명, 중국에서 1천40명이 응답했음.
- 일본인은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로 작년 9월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 당시 중국 정부의 대응을 꼽은 응답자가 64.8%로 가장 많았음. 또 중국인은 역사 문제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의 일본 정부 대응, 센카쿠 문제 등에 대해 일본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
-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문제로는 일본인의 63.2%, 중국인의 58.4%가 영토문제를 꼽았음. 자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인은 57.5%가 탈(脫)원전을 요구한 반면, 중국인은 51.9%가 '현상유지'를 원했음.

아. 중·일 관계

● 美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파문 확산(8/9)

-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미 국무부는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나섰고, 이에 국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IHO에 제출했다는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일본해'를 우리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에 의해 결정된 표기들을 사용한다"며 BGN의 기준에 맞는 표기가 '일본해'임을 재확인했음.
 - 이는 미국이 IHO에 제출한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IHO를 상대로 동해·일본해 병행표기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노력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동해와 일본해 표기가 병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설득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외교통상부 신명호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언급한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동해표기에 관한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라면서 "그간 국제사회 내의 동해표기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과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음.
 - 신 부대변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 여야 구분 없이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음.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 이스트 시(East Sea)로 병행 표기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
 - 같은 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는 민족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아주 상징적인 바다인데 다른 나라에서 일본해라고 이름을 바꿔 함부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미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예정된 IHO 총회에서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리가 (너무) 차분하고 조용한 외교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을 두둔한 것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미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최소한 동해 병기표기 만이라도 미국 측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이처럼 국내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외교당국으로서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강도 높고 지속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한·일간 외교전이 가일층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美, 부록에 '동해' 대안명칭 수록하자는 입장"(8/10)

- 미국 정부는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해양과 경계'라는 책자의 본문에 일본해(Sea of Japan)를 단독 표기하되 부록에 '동해'를 '대안명칭(alternate name)'으로 수록하자는 입장을 국제수로기구(IHO)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9일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부록에 동해를 대안명칭으로 수록하자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동해 표기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해양과 경계'를 펴내는 주체인 IHO의 미국대표인 크리스 앤더슨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미국은 본질적으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해양과 경계' 부록에 동해가 '대안명칭'으로 수록된다는 것은 '일본해의 다른 이름으로 동해라는 명칭도 사용 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IHO는 1929년 '해양과 경계' 초판을 발행하면서 동해를 'Japan Sea'라고 표기했고, 이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기가 됐다. 이어 1937년(2판)과 1953년(3판) 개정판이 출간됐지만 일본해 단독표기는 그대로 유지됐음.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느라 동해표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1991년 유엔 가입 이후인 1992년 8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IHO에 나가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 이후 한국은 동해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병기하는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왔음. 최종 결정권을 준 IHO 총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2012년 19차 총회를 앞두고 있음.
- IHO는 이와 관련해 실무그룹을 운영해 결론을 내기로 했음.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모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정부, '동해 병기' 입장 백악관에 또 전달(8/11)

- 한국 정부가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백악관에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미국을 방문 중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0일 토머스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빌 번스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해 표기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이 문제가



- 지닌 '폭발성'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도널던 보좌관 등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이 오래된 기존 입장임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이 이날 면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양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간 본격적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다뤄온 이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이들 정부만을 상대로 교섭한다고 당장 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 지도제작 업체들을 접촉해서 1-2%이던 병기율을 28% 정도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일본 외교력도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병기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주해군기지, 美-中에 낀 한국의 딜레마" < IHT > (8/12)

-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강정마을 현지에 내걸린 현수막에 적힌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 중국 해군기지에 대해 목숨 걸고 투쟁하자"라는 구호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2014년 완공되면 잠수함을 포함한 20척의 군함이 상주하게 되며 미 군함의 방문도 허용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 기지가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내 상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현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제주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동북아 해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이 미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군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 기지를 이용해 동북아 해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임.
- IHT는 군사 우방인 미국과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 중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의 이면에 있는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또는 '한국이 중국과 대처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